

# 한국경제, 1997년

유철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 1. 머리말

‘경제전망’은 보통 그 다음 기간에 성장률이 어떻고, 혹은 금리나 환율이 올라가던가 떨어진다던가 하는 식으로 발표되곤 한다. 그러나 예측된 수치 이면에는 반드시 그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象)이 있기 마련이며, 오히려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내년도 경제전망과 관련하여서 이 그림 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아마도 ① 산업구조의 변화, ②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으로 상징되는 개방 및 새로운 경제 운용의 규칙(룰), 그리고 ③ 이와 동시에 진행되는 재계-정부-노동계 사이의 경제권력 재편 등이 될 것이다.

전망에 대해 또 한가지 유념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과 일어났으면 하는 일(희망 사항)을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희망사항은 전망의 목적(目的)과 관련된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경제주체의 대응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예상 성장률이 너무 낮게 나왔다고 보고 정부가 경기부양조치같은 대응책을 강구하거나

기업이 임금 동결 정책을 마련한다면, 실제 결과는 전망과 달라질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희망사항 혹은 목적에 따라 성장률을 비관적으로 강조하거나 실업을 상승을 부각시키는 등 전망 자체를 왜곡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사실 목적이나 희망사항에 충실한 전망이 좋은 전망일 수도 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글은 어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그대로 두면 어떤 식으로 우리 경제가 진행될까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이다.

## 2. 경상수지 적자와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경제권력의 재편

늘어나는 재고, 악화되는 기업의 채산성, 제자리걸음하는 수출과 200억불 내외의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불안한 물가 등이 요즈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표현하는 말들이다. 또 이러한 상황이 단순히 경기 불황 때문만은 아니며, 고비용 구조 그러니까 생산비용을 높게 만드는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한다. 재계에서는 심지어 ‘위기’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쓰고 있다. 경기는 한때 좋았으면 그 다음에는 나빠지기 마련이고, 또 이번 불황의 침체 정도가 과거의 불황기에 비해 그리 심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까지 하는 데는 의도적인 과장이 다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시장의 변화와 같은 외부 충격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독과점 구조 때문에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운 등 많은 취약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때마다<sup>1)</sup> 등장하는 ‘경제 위기론’을 순전히 허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OECD 가입이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듯이, 개별 기업이나 재벌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급격히 완화되거나 철폐되는 등 기존의 경제체도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하다.

여기서는 경제 위기론의 실제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는 소위 ‘고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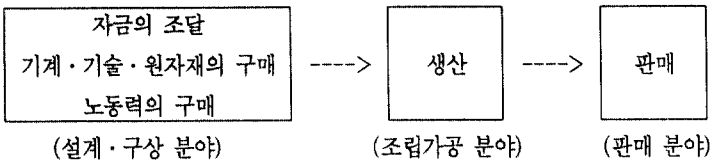
---

1) 가까운 예로 지난 90년대 초에도 경제 위기론이 등장했었다.

구조'의 문제와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라는 문제를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진단해 보고, 경제권력의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진행중인 경제구조 변화를 어떻게 보아야 할 지 살펴보기로 하자.

(1) 경상수지 적자와 산업구조의 변화

70, 80년대의 경제개발계획은 제조업, 특히 그 중에서도 중화학 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이었고, 그 결과 한국의 산업구조는 이들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산업부문간의 불균형이 심하다. 산업간 불균형은 요즘 가장 주목받는 현상인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이다. 이 불균형은 보통 이야기하듯이 수입을 유발하는 수출구조를 의미할 뿐 아니라, 한국이 이루어 놓은 특정 부문의 높은 생산성이 제 힘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지난 1972년 중화학 공업화를 선언한 이래 한국은 제품 제조 기술에 심혈을 기울여 투자해 왔다. 그 결과 8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자동차, 전자 등을 중심으로 조립가공분야의 생산성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3저라는 유리한 외적 조건이 사라지면서 그 동안 누적되어 온 산업 구조상의 문제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고비용 구조, 구체적으로는 높은 물류비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산업구조의 문제를 보기 위해 일단 임금 문제는 별개로 놓자). 산업 생산은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자금을 조달해서 토지나 생산설비를 임대 또는 구입하고, 또 노동력과 원재료를 구입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리고 일정한 생산과정을 거쳐 상품이 나온 뒤에는 판매망을 통해 팔아야 하며, 소비자에게 그 물건이 전달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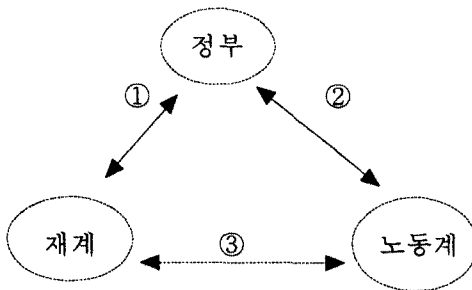
그런데 최근 고비용 구조라고 부르는 내용을 뜯어보면 금리, 토지가 격, 상품과 원재료의 수송비용, 정보의 전달비용 등 직접적인 생산과정(조립가공 분야)의 바깥에 있는 산업 부문들의 낮은 생산성과 관련되어 있다. 즉, 금융, 통신, 정보, 유통(도소매), 교통 등 경제라는 그물망의 연결통로(Network)들에 문제가 있어서, 경제개발 과정을 통해 이루어 놓은 조립 가공 분야의 높은 생산성이 발휘되지 못한다. 중화학 공업화가 본 궤도에 오르면서 전국이 생산기지화되고, 모든 생산과정이 타부문 및 타지역의 기업과 보다 확대된 물류 관련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증가에 따라 내수시장도 무척이나 커졌다. 기존의 비좁은 연결통로는 물동량 및 정보 유통량의 흐름을 정체시키고, 비용을 급격하게 증가시킨다. 현재의 국제수지 상황을 보면 경공업 부문과 무역의 수지 부문은 적자를 보이고, 중화학 공업 부문은 여전히 흑자를 보이고 있다.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로 불리는 통신과 교통뿐 아니라, 유통업이나 금융부문에 대한 신투자는 중화학공업 부문의 흑자를 극대화하고 그이의 부문의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다. 중화학 공업 부문의 높은 생산성이 발휘되려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부문에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향후 산업구조 조정의 방향을 보여 준다. 흔히 그렇듯이 새로운 투자 기회는 경제의 병목분야에서 생긴다. 갑자기 이유도 없이 통신, 정보, 유통, 금융, 교통 부문이 새로운 황금 투자처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 대기업 그룹들이 유통 부문이나 금융부문에 투자하기를 애달아하는 것은 다 경제적 계산에 근거한 것이다. 경제 개발기에 형성된 정부의 규제, 제도, 관행 등이 앞으로 계속 약화되거나 폐지됨에 따라 대기업 그룹들을 점점 더 자신이 원하는 산업에 진입해 들어 갈 것이고, 기존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도 빠르게 변화해 갈 것이다<sup>2)</sup>.

2)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는 향후 노동계에 많은 새로운 현상들을 초래할 것이다. 제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해 온 노동운동이 다양하게 갈라져 갈 것이고, 전문업종이나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운동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

## (2) 경제권력의 재편과 한국 경제구조의 변화 전망

국민경제의 산업구조가 변화해 가는 것은 결국 어떤 산업에 얼마만한 자본을 투자할 것인가에 달려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권이 소위 경제권력의 핵심에 해당한다. 최근에 찾아지고 있는 정부와 재계간의 갈등은 바로 이 투자의 결정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둘러싼 대립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산업구조의 변화는 경제개발기에 형성된 정부-재계-노동계간 관계의 변화와 함께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 관계의 변화가 사실상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구조 변화의 핵심이다.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은 정부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경제주체로서 재계와 노동계 등 민간 경제 주체들을 보호·육성 및 억압해 가면서 이루어 졌다. 보호와 간섭(혹은 개입)은 동전의 양면이었다. 이 때 재계와 노동계간의 관계(아래 그림에서 ③)는 자본주의적 시장 계약이라는 직접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정부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이 때문에 사소한 작업장의 노사분규도 노-자간의 대립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곧 바로 노-정 대립(그림에서 ②)으로 확대되기 십상이었고 대개 공권력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개입이 뒤따르곤 했다.



---

협계 만드는 조건들이 증가할 것이다.

최근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규제완화는 정부-재계간의 보호와 간섭이라는 기존의 관계를 새로 만들자는 것으로서,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발기의 정부-재계-노동계간 관계를 무너뜨리는 효과를 갖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의 결과로 정부가 민간 경제주체들을 육성할 필요성이 감소하면서 보호와 개입의 근거도 약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사실상 경제권력이 정부로부터 재계(특히 대기업 그룹)로 이양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경제권력이란 자신의 의도로 타인(他人)이나 타(他) 경제주체의 경제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비경제적 힘을 의미하는데,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의 결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의 결정은 그 경제의 산업구조 변화와 국민의 향후 경제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투자의 결정권과 떼려야 뭄 수 없는 것이 바로 자금(자본)의 조달(즉, 금융)이다. 자금이 조달되지 못하면 투자 계획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금융부문은 정부가 세운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실현시키고 민간 기업을 관리 통제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주체의 변화는 그 이면에 경제 운용 방식의 전체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기존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투자계획과 자금조달의 방식 그리고 계획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판매처와 판매 방식 및 이윤 수준까지 실제로 포함하고 있었다. 국가에 의한 자금조달 및 집행이 '경제개발계획'의 실효성을 뒷받침했는데, 금융기관의 직접 통제와 국가 보증에 의한 외자 조달이 그 기본 수단이었다.

기존의 경제운용방식에 변화의 필요성을 가져온 것은 금융기관의 직접 통제에 의한 자금조달의 한계와 외자 조달에 있어서 국가 보증의 불필요성(혹은 비효율성)이었다. 투자규모의 확대에 따라 정부가 투자자금을 적절히 조달하기 어려워졌으며, 3저 호황기의 국제수지 흑자와 민간기업의 대외신용도 증가로 외자 차입의 정부보증(한국은행 보증)과 국가관리가 불필요하게 된다. 이에 외환집중제의 폐지나 완화 등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당연히 요청된다. 경제 개발기에는 외화의 조달 여부가 투자의 실행에 결정적으로 중요했으며, 외화 배분권은 곧 투자

계획 및 실행에 대한 정부 개입을 당연시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따라서 외환 집중제의 폐지는 민간기업이 스스로 벌어들인 외화를 스스로 보유, 관리 및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국가에 의한 투자재원 관리 체계의 한쪽 축이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 기존 자금조달메커니즘의 붕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의 현실적 구속력도 급속히 약화되어 갔다. 이는 곧 투자계획 주체로서 국가의 기능이 저하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실제로 3저 호황기 이후 흑자 재원을 이용한 투자계획은 민간기업 특히 대기업 집단에 의해 주도적으로 수립·집행되는 현상이 뚜렷해 졌다. 결국 투자 주체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경제의 구조변화가 가시화된 시점은 80년대 후반 소위 3저 호황기를 막 지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80년대 후반에 '관치금융 폐해론'과 중앙은행 독립을 포함한 금융산업 및 정책 개편 논의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더 이상 투자계획의 주체가 아닌 국가가 금융기관을 직접 통제하면서 자금조달 및 배분을 계속 결정하는 모순을 해소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제 제도 변화의 방향은 '투자계획의 수립자가 자금조달상의 제반 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투자 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를 위해 이른바 시장의 활성화 혹은 시장 원리의 도입이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는데, 이는 정부주도에 의한 투자계획과 자금배분 방식을 전체적으로 바꾸어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기존 재계-정부-노동계간의 관계는 일차적으로 재계-정부간 관계에서부터 변화가 발생한다. 또한 재계-정부간 관계에서 정부의 비시장적이고 비경제적인 규제나 보호가 약화되거나 폐지되면, 이는 곧 바로 정부-노동계간 관계에서 정부의 개입 방식도 변화시키게 된다. 즉, 이제 정부는 재계의 보호 및 육성자로서 재계를 대신해 노사 문제를 풀어 주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간 정부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졌던 노사관계에도 새로운 규칙(률)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새로운 노사간의 룰로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자는 것, 그것이 바로 정리해고제의

도입 등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높이려는 시도들이다. 정부가 빠져나간 상대라면, 기존의 법률이나 제도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재계는 느끼고 있는 것이다.

올해 한국은 기업 활동의 무한 자유를 추구하는 OECD에 가입했으며 1997년부터는 정회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내년도는 앞에서 이야기한 산업구조의 변화(비제조업 부문의 비중 증가)와 경제구조의 변화(재계의 경제권력 강화)가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동시에 개발금융체제를 구성했던 각종 금융규제들의 폐지나 수정은 내년에도 빠르게 계속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대기업 집단의 금융기관 소유 등 경제력 집중에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산업(대기업 집단)과 금융간의 분리라는 정책 명분은 그 동안 금융산업개편 등 여러 가지 제도변화가 지연되는 원인이었으며, 향후 한국경제의 지배구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OECD 측은 한국이 금융기관의 소유구조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거래의 공정성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라고 권고해 왔다. 현실적으로도 1998년부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합작투자나 현지법인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상을 선정해서 금융기관 소유를 막는 규제는 폐기될 수밖에 없다. 굳이 민족주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sup>3)</sup>, 외국인에게는 국내 금융기관의 소유를 허용하고 국내 재벌에게는 불허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OECD가입은 이미 현실화된<sup>4)</sup> 재벌로의 경제권력 이양<sup>5)</sup>을 추인하는 것이며, 결국 금융자유화에 의해 대기업 집단이 금융기관을 직접 소유하는

---

3) 이미 민족주의에 호소하면서 대기업의 금융기관 소유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금융규제 완화의 중요 논거가 되고 있다.

4) 재벌의 금융지배 현황에 대해서는 김상조(1996), “재벌과 금융”, 학술단체협의회 제 9회 연합심포지움 참조.

5) 이 글에서 경제권력 이양은 투자권과 자금조달권(즉, 자원 배분권)이 정부로부터 재벌로 옮겨갔다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보다 광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것이 허용될 것이다<sup>6)</sup>. 시장의 원리라는 것은 소유의 자유와 소유에 해당 하는 만큼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 3. 경기순환상의 회복기, 1997년

이제, 보통 하는 대로 경기순환적 요인과 한국의 수출시장인 세계경제의 여건 그리고 정책적 요인 등을 중심으로 내년도 경제를 개략적으로 전망해 보자.

현재 한국경제는 95년 3/4분기 근처(추정)를 정점으로 시작된 경기 불황기를 보내고 있다. 과거의 통상적인 경기순환기간을 고려하면 대체로 97년도 2/4분기 말경에는 서서히 회복으로 돌아 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복시작 시기에 대해 몇몇 재계의 경제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97년 3/4분기나 그 이후에 가서야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와 있으며, 더 나아가 96년보다 극심한 경기침체의 가능성까지 예상하는 비관적인 전망도 제시 되어 있다.

미리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97년도에 경기 침체가 올해보다 훨씬 심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며, 성장률도 올해(6.8% 내외로 예상)와 별 차이 없는 6.7% 내외로 예상된다. 상반기에는 성장률이 5%후반까지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하반기 성장률은 꽤 높게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일차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및 교역 증가율이 상승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국내 경기순환요인에서 보면 재고를 증가도 거의 한계에 와서 앞으로는 낮아질 것이고, 설비투자의 순환 패턴으로 보더라도 내년 하반기 초반에 회복이 시작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 SOC 건설에 산의 증가와 민자유치에 의한 건설 경기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높다.

---

6) 최근 한미은행에 대한 삼성의 지분한도 초과가 예외로 인정받았으며, 은행장 선임문제에 대한 은행법 개정에서 신한은행과 한미은행, 그리고 몇몇 신설은행에 예외가 적용되는 등 규제 체계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의 은행법 개정도 과도기적인 것이며 한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 수출과 설비투자

경기 회복에 관건이 되는 요소는 역시 수출과 설비투자이다. 최근 재계에서 내년도 경제를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성장률도 6% 초반까지 낮게 전망하는 것도 자체 설문 조사한 설비투자 전망이 극히 나쁘게 나왔고 수출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비투자에 영향을 주는 기업주의 기대는 수출 회복과 재고율의 하락 같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잠깐사이에 바뀔 수 있다.

최근까지 나온 내년도 세계경제전망이나 관련 자료를 모두 살펴보면, 내년도 세계경제는 전체적으로 보아 올해보다 성장률이 높아 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좋았던 미국 경제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올해 미미한 회복세를 유지했던 일본과 상대적으로 침체를 보였던 독일 등의 서유럽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개도국의 경우 아시아권의 성장률이 올해 수준인 7%중반 수준에 머무는 반면, 중남미 및 구 동구권 경제의 성장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이 내년 초 전국인민대회를 기점으로 96년까지의 경제 긴축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의 성장률이 7%선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점과 중국이 긴축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점은, 이들 지역이 한국의 주력업종인 중화학 공업 제품의 중요한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수출이 회복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올해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보다 훨씬 커진 것은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주력 중화학 공업 생산물의 국제 가격이 급락한 것에 기인했다. 예를 들어 96년 초만 해도 40달러 이상이었던 반도체(16메가디램) 가격이 요즈음은 10달러선 이하까지 급락해 있다. 그런데 주력 업종의 경우도 수출 물량은 그렇게까지 하락하지 않았으며, 중화학 공업 부문이외의 산업 부문이나 중소기업의 수출은 여전히 15%선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 수출 가격이 현 수준에서 올해처럼 추가로 더 급락하지 않는 한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아마도 올해 보였던 원화가치의 하락도 내년 수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97년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영향이다. 내년엔 설비투자 증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연구기관들은 대부분 선거가 기업주의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80년이후 2차례의 대통령선거 시기를 관찰해 보면 대통령선거가 경제 회복기를 침체로 바꾸거나 침체기를 회복으로 바꿔 놓은 경우는 발견할 수 없다(설비투자의 순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 경기 흐름과 설비 투자에 있어서 대선 이 그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 경제정책과 물가

내년도 경제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노선이 대립하고 있다. 하나는 경제성장을 둔화시켜 수입을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안정화 대책이고 또 하나는 기업주의 투자 마인드를 복돋아 주고 수출을 크게 늘려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시키고 물가 상승은 어느 정도 감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정부 내부에서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마당에 성장을 둔화시키는 안정화대책을 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년 초에 SOC 관련 민자 유치를 촉진하는 대책이 한번쯤 더 나올 것으로 보이고, 통화 관리도 계속 느슨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물가를 안정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향후 갈수록 행정력을 동원한 물가 관리 방식을 써먹기가 더 어려워 질 것인 만큼, 물가불안은 내년도에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 실업과 임금

전망기관들에 따르면 실업률이 0.2~5% 정도 상승할 것(실업자수로는 5만~10만명 내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에 따른 인원동원을 고려하면 당장 내년도에 실업률 자체가 크게 문제시될 가능성은 약하다. 숫자상으로는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재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더 커질 것인데, 내년에는 한번쯤(예를 들어 대선 공약 같은 데서) 실

업자의 재교육이나 실업보험의 현실화 문제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이다.

<표 1> '97년 경제전망 (증가율 %)

	'96(추정)	'97(전망)
실질GDP	6.7~6.8	6.7
민간소비	7.0	6.7
설비투자	3.5	5.6
건설투자	5.0	7.3
수출(FOB)	4.8	10.8
수입(CIF)	9.2	7.1
경상수지1)	-190~ -200	-160
소비자물가	4.6	4.5
금리(회사채수익률)2)	11.8	11.3

주 : 1) 억달러 2) 기간평균

내년도 거시경제전망을 요약해 보자. 민간소비 증가율은 둔화되겠지만,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SOC 건설의 활성화와 수출의 소폭 회복이 예상된다 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성장률은 96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이다. 특히 설비투자가 2/4분기말 경을 전후한 시기에 회복되고, SOC건설이 3/4분기 이후에 집중될 것이므로 「상반기 침체 지속-하반기 회복」의 형태가 나타날 전망이다. 그 외 물가는 여전히 불안하겠고, 산업구조조정이나 실업문제는 적어도 내년에는 별 이슈가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변화와 관련해서 보면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계속 완화되거나 폐지될 것이며, 노사간의 시장관계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또 경제력 집중에 관한 규제 가운데 많은 부분이 지속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KLSI**